

<토론문>

자율운동과 지역사회운동의 만남을 위하여

김경례(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1. 들어가며

시민없는 시민운동, 여성없는 여성운동,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운동,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운동의제를 적극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함으로 인한 중앙 의제에의 종속, 지역에 기반을 둔 연구자 및 활동가의 지속적인 재생산 메커니즘의 부재 등등은 현재 지역사회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집단지성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총선 국면의 줄서기 정치, 세대 간의 책임 떠넘기기,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무기력한 수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운동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운동의 전망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이번 포럼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운동의 방향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과거의 운동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결합될 때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자율운동이 현재 지역사회운동을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한 단상이다.

2. 자율운동의 특징

서구에서 1968년 혁명을 계기로 유럽사회에 퍼져나간 자율운동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권력을 해체해 가는 방식의 운동이다. 즉 반권력 운동이다. 이는 운동세력과 국가권력간의 관계, 그리고 조직의 운영체계와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운동은 권력자와 피권력자간의 대당을 설정하고 피권력자가 대동단결하여 권력을 장악하여 해방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상(idea)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대자적 존재와 즉자적 존재 간의 위계와 계몽, 전위집단이 갖는 일종의 영웅주의를 목도했고 무엇보다도 또 다른 권력이 되어 국가권력에 포섭되고 그

토록 증오했던 지배권력과 유사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자율운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조직간, 집단간, 개인간의 반권위주의적 관계, 즉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일상의 삶을 변형시키는 운동이다. 즉 다르게 살기 위한, 다르게 살아가는 운동이다. 자율운동은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시적 변혁을 추구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의 부드러운 전복을 꿈꾼다. 이런 의미에서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모색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단지 운동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화하고 획일화하려는 지배권력에 맞서 색다르고 특이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느냐의 문제이다. 이런 흐름은 지배권력의 강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배권력의 내면화 메커니즘인 '내 안의 파시즘'을 문제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주체를 존중하고 만들어나가는 운동이다. 색다르고 특이한 삶을 살아가는 주체들은 많은 경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회적 경계나 소수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배질서를 위협하고 도덕률을 파괴하며 보편성과 객관성, 합리성이라는 인식구조와 잣대를 가지고는 도통 파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실존체들이기 때문이다. 자율운동은 운동세력으로서의 산업노동자의 헤게모니와 당, 조합의 매개적 역할을 부정하고 여성(소수자), 학생(청소년/아동),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이주민, 노숙인, 동(양)성애자, 장애인 등 새로이 등장한 사회적 주체와 당사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3. 지역사회운동과 자율운동의 만남

2009년 현재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는 550개에 달한다. 대부분 법인 단체로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화 운동세력에 대한 보은의 일환으로 진행된 운동의 사업화(프로젝트화) 경향은 소위 '진보'적 운동진영까지 제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권력과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약화되었고 일종의 공생적 견제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렇다고 유신독재 반대, 군부정권 퇴진, 민주화 대투쟁으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의 운동주체들인 노동자, 농민, 학생, 비판적 지식인이 일궈놓은 투쟁의 성과나 역사적 의의가 없다거나 쇠퇴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 평가되어야 할 일이다. 다만 '386세대'로 특징지어지는 운동세력의 일부가 정계나 공공기관에 진출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일종의 민관협력기구의 대상이 되면서 국가 및 기성정당, 관에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점검해 보자는 것

이다. 또한 거대담론과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이념이나 사상에 입각한 선언적이거나 당위적인 운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가져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중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주입하려 들고 일종의 영웅주의(엘리트주의)에 젖어 스스로 대중의 삶으로부터 창발하는 의제들과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보자는 것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집단 안에서 패거리 문화나 권위주의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의 조직이 지향하는 운동이나 그 방향이 전체 운동의 중심이며 그것만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자는 것이다. 운동세력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권위주의 문화와 부문운동별, 또는 부문운동 내의 조직 이기주의는 현재, 세대(조직) 간의 갈등을 낳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운동의 재생산 구조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기도 하다.

대동단결을 통한 연대와 세력화가 한편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집단의 배제와 차별화를 낳고 색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비가시화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국가로부터의 독립, 표준적인 삶을 거부하는 일상생활 속의 실천, 소수자되기를 통한 느슨한 연대, 차이와 관계를 존중하는 반권위주의적 문화운동 등은 다시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할 실천 전략이다.